

‘반부패 전쟁’에 한전 입찰비리 수사 촉각

입찰 탈락 6개사 ‘낙찰 예정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 “10년동안 이어진 ‘비리 덩어리’ 도려내는 계기로” 한전은 지역법조인 5명 법률고문 위촉 대응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덩어리’ 척결 선언 등 부패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입찰 비리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완구 총리 담화에 이은 박 대통령의 부패 척결 지시로 인해 공공·민간 부문을 망라한 고강도 부패 청산 수사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장, 한전 입찰 비리로 피해를 봤다는 전기업체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부패와의 전면전’ 선언이 10년간 고질적으로 진행된 한전 ‘입찰 비리 덩어리’를 도려내는 계기

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S전력 등 6개 업체는 최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입찰과 관련한 3억원 규모의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한전의 부실한 입찰 시스템 관리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점, 한전 입찰 결과 발표 이후 비리 징후를 파악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근거로 본안 소송을 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한전의 입찰결과 발표 뒤 즉각적인 이의 제기가 이뤄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한전 측의 ‘재입찰’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입찰 문제점을 내세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선의의 탈락업체들의 입장을 감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비리 낙찰업체 때문에 순위에 밀려 협력업체가 되지 못했다면, 검찰 수사로 입찰 비리가 확인된 이상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상당수 전기업체들은 정부의 ‘부패와의 전면전’ 선언이 이뤄진 만큼 지난 10년간 쌓여온 한전 입찰 시스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전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지역 법무법인을 비롯, 최근 위촉한 5명의 법률고문을 중심으로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법원의 확정 판결 전이기 때문에 입찰

비리에 가담해 협력업체로 선정됐더라도 아직까진 재입찰 등은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업체의 비리 연루 사실을 알고도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업체들 사이에서는 한전 입찰 및 공사 ‘뒷돈’ 비리가 업체들의 적극적인 의혹 제기와 수사 협조로 알려졌다. 수사팀 교체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불만도 커지고 있다.

A전기공사업체 대표는 “협력업체 선정 입찰 직후 특정 업체가 낙찰을 독차지한 사실을 알고 즉각 한전을 찾아가 해당 업체를 거론하면서 비리를 지적했다”면서 “10년간 이어진 입찰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한전측은 비리 업체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악용 돈벌이 한 장애인단체 회장들

중개업자와 짜고 명의 빌려 28세대 당첨...웃돈 주고 되팔아 3명 입건...방치 대책 마련 시급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제도가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와 장애인단체 회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 2월 5일자 6면> 장애인단체의 수장이 브로커와 짜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접근, 불법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 능변범죄수사팀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초 광주 모 장애인단체회장인 B씨와 C씨를 잇따라 만나 속삭인 제안을 했다.

A씨는 B·C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을 줬고, 회원들에게 한 명당 150~6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넸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B·C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우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공급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A씨는 B·C씨를 장애인 명의 모집책으로 정해놓고, 서류비와 당첨시 명의대여 등의 명목으로 한 사람당 약 100만원 가량을 먼저 지불하는 수법으로 회원 10명의 명의를 건넬받았다.

이 과정에서 B·C씨는 평소 친분이 두텁고 급전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현금 5만원을 지급하고, 분양에 당첨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해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A씨에게 건넸다.

A씨도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회원 28명의 명의를 빌렸다. 이들이 빌린 회원 명의로 모두 38명, 이중 광주 동구·남구 아파트분양에서 당첨된 세대는 모두 28세대다. A씨는 당첨된 분양권을 중수·방향 등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각 세대당 300~1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아 99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B·C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을 줬고, 회원들에게 한 명당 150~6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넸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B·C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파진흥원 직원이 거액 국고보조금 빼돌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으로 일하면서 몰래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를 차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파진흥원 5급 직원 김모(38)씨와 동업자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4월 경력직 사원으로 전파진흥원에 특채된 김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콘텐츠 진흥부’에 근무하면서 2012년 초 ‘하모니어스’ 외주제작업체를 설립했다.

공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전면에 나설 수 없었던 김씨는 종하고 동창인 이씨를 회사 대표로 내세웠다.

이후 김씨는 케이블TV사업자와 군소 방송사 5곳에 소속된 PD 8명의 명의를 빌려 2012년도와 2013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기획서와 지원서를 제출해 14개 사업에 선정, 모두 10억7000만원의 제작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연합뉴스



모두가 행복한 사랑의 급식 봉사 18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 주공1차아파트 사회복지관에서 삼성전자와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사랑의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끊이지 않는 여수산단 안전사고

계면활성제 생산 공장 가스 폭발 3명 부상

여수국가산단의 한 화학공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 근로자 3명이 대피하는 중 다치거나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부상을 입었다. 석유화학 공장 152곳이 밀집한 여수산단에서 화재·기름유출·가스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화약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밤 9시50분께 여수시 중흥동 세제 재료인 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아이씨케미칼 공장서 화학 반응기가 폭발, 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모(27)씨 등 3명이 대피 도중 넘어져 다치거나 가스를 흡입,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폭발로 인한 화재는 50분만에 진화됐으

며 소방은 재산피해를 2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 작업장에는 8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날 사고는 시제품 위험성 평가에서 원료 배합 비율을 잘못 계산한 탓에 이상반응을 보여 반응기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폭발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이 반응기(크기 2.15m)는 계면활성제 제조 원료인 아민과 산화에틸렌을 중화시키며 쓰이며 지난 1993년에 설치됐다. 산화에틸렌은 멸균가스와 살충제 원료로도 쓰이며 인체에 노출되면 구토, 결막염,

백혈병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5월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65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점검에서 해당 업체에 안전 관리자 교육 확인 미시명·소화기 2대 노후화 등을 시정조치했다. 여수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등은 현장 작업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새내기 여대생의 탈선...용돈 마련하려 친한 언니 통장 훔쳐



○...친한 언니의 예금통장을 훔쳐 돈을 빼낸 대학 신입생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행.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박모(여·20)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신모(여·21)씨의 원룸에 들어가 예금통장을 훔쳐 보관하고 있다가, 일주일 뒤 현금인

출금 코너에 찾아가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혐의.

○...박씨는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알 아내기 위해 신씨 생일과 전화번호 등을 무작위로 눌러보던 중 우연히 비밀번호가 일치하자 현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박씨는 “대학에 들어가면 용돈이 필요할 것 같아 순간 나쁜 생각을 하게 됐다”고 변명.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화순 “전원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6400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정남향, 2013년 신축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가능
- 신우 APT 105동 옆
- 매매 - 1억 7400만원(대출 1억 1천만원 포함)
- 5층 중 2층 34평
- 방 3, 화장실 2, 거실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